

## 미국 특허청 예산 전용 법안에 대항하는 산업 교역 연합

[출처 : <http://chemweb.com/alchem/2000/news/> :  
2000년 06월 30일]

미국 하원의 세출위원회에서 지난주 발의된 법안 즉, USPTO(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가 산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특허료중 2억 9천 오백만 달러를 2001년도 예산에 포함된 비정부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항하고자 산업 교역 연합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예산 전용이 시행되면 USPTO의 기존 예산 중 25%의 삭감이 이루어져 최종 예산은 9억 4천 9십만 달러가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법안은 재정 분석가들이 지적 재산과 특허를 기업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생각하게 되고 많은 특허 응용 기술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시기와 동시에 발의되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예산 전용은 경제에 지속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 재산권 경영 및 자문회사인 General Patent Corp. International의 사장인 Alexander Poltorak는 말하고 있다.

이 법안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IPO(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NAM(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그리고 American Electronics Association은 이 법안에 대응하여 예산 전용을 통한 삭감이 특허 응용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고 기술 혁신의 목을 죄며 중국에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로비활동을 벌였다. USPTO는 미 국민의 세금이 아닌 특허료로 재정을 충당하는데 하원 의원들은 세금으로 이루어져야 할 재정 프로젝트에 이 돈을 쓰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인텔사의 대변인은 이러한 예산 전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허청은 좀 더 현대화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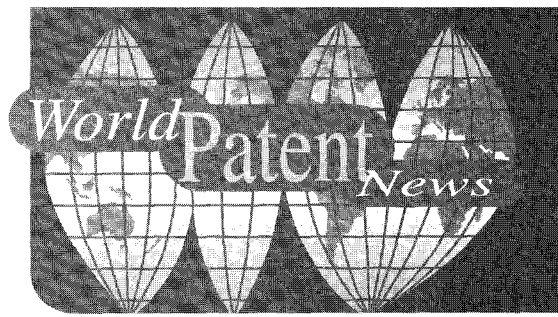
을 갖추고 더 많은 특허 심사 요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허 심사 기간이 벌써 18~20개월로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 전용으로 인한 삭감은 특허 출원자들로 하여금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파생적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할일은 늘어나는데 관련 인력을 줄이면 발효되는 특허의 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며 특허 분쟁의 여지를 더욱 증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IPO의장인 Herbert C. Wamsley는 25%의 예산 삭감은 USPTO에 있어서 "끝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러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뒤처리 추가 비용이 약 5천 6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고용을 냉각시키고 특허 출원을 저해하여 첫째에만 특허 출원 절차상의 소요시간이 약 3분의1 정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USPTO의 Q. Todd Dickinson은 말했다.

특허 출원 및 특허 응용기술은 최근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유지비로 거둬들이는 돈이 2001년에는 12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3억 달러에 달하는 돈의 전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많은 산업체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후 6월 23일 하원은 예산 전용 금액을 1억 3천 4백만 달러로 줄여 재 발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업 교역 연합은 투쟁 전략을 수정하였으며 그 첫 계획으로 미 상원에서 발의 중인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유사한 법안을 공격 목표로 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발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seiung@hanmail.com)

출처 해외과학기술동향



## BM 특허분쟁 조짐

비즈니스 모델(BM) 관련 특허 획득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분쟁이 잇따를 조짐이 일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한국통신 등 대기업 외에도 열림기술, 네오위즈, 밀레니엄테크마 등 인터넷 업체들이 속속 BM 특허를 획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특허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분석 업체인 밀레니엄테크마(www.ahantec.co.kr 대표 강승일)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리서치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모델은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 설문을 작성해 응답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 리포트 작성, 경품 지급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분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회사 문상헌 이사는 "아하넷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특허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일정한 액수의 특허료를 받거나,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화모뎀을 이용한 인터넷 자동접속 서비스로 지난 4일 BM특허를 획득한 네오위즈(www.neowiz.com 대표 나성균) 역시 "대형 자본으로 뒤늦게 진입, 장기적으로 공정경쟁을 해칠 소지가 있는 거대 기업의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특허권 행사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BM특허를 둘러싼 분쟁조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특허 출원단계에서 다툼도 일고 있다.

'애드웨이'라는 움직이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넷츠웨이(www.netsway.net 대표 박

홍순)와 매직플레이산 특허를 출원한 갯2갯닷컴(대표 문의배)이 그 장본인이다.

갯2갯닷컴은 넷츠웨이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로 전화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고, 넷츠웨이는 갯2갯닷컴 보다 특허 출원 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매직플레이산 불법 기술이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두 회사는 이같은 분쟁이 지속될 경우 상호 이로울 게 없다고 판단, 시장을 공동 공략하지는 협상을 진행했으나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된 상태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내년 하반기에 나올 특허를 기다리게 될 입장에 처했고 계속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513건에 불과했던 BM특허 출원 건수가 올해에는 2000건으로 늘어나고, 1133건이었던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도 2750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달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 출원은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해 특허획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들은 "BM특허의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허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WIPO, "사이버스쿼터" 제재 강화

인기있는 인터넷주소를 선점해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버는 '사이버스쿼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

(WIPO)는 인터넷도메인을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보호하는 국제규범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WIPO는 인명·상표·지명·의약품질·국제기구명 등 널리 알려진 명칭에 대한 분쟁 해결방안을 작성해 내년 4월까지 WIPO회원국과 인터넷단체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WIPO는 지난해 12월 인터넷도메인과 관련된 단일분쟁해결지침을 마련해 세계레슬링협회(WWW), 크리스천 디오르, 나이키 등의 분쟁을 해결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IT 저작권' 일본의 압박

일본 문부상 자문기구인 저작권심의회가 최근 '정보기술(IT)시대'의 저작권정책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내놓았다. 이번 제언의 핵심은 아시아 지역에서 게임소프트웨어 등 해적판을 억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침해로 프로바이더(접속업자)가 지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일본에서 IT와 관련된 저작권문제가 본격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저작권심의회는 "아시아 각국의 저작권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이 지역에서 저작물 위법 복사대책이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국가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굵지 않은 눈길이 많다. 이 기구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침해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중재 및 조정기구(ADR)설치를 촉구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저작권침해행위를 할

때 프로바이더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자가 이용자 개인이 아니라 프로바이더에게 위법 홈페이지 삭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 초안은 일본정부가 외국에 대해 IT시대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탄 성격을 지닌다.

저작권심의 회의는 이달중 'IT 및 전자상거래 진정에 대응한 국제저작권정책의 존재방식'이라는 제목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뒤 9월에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 문화청도 빠른 시일 내에 저작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 각국별로 저작권 침해 규모와 위법행위 양태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반 저작권문제에 관한 한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IT관련 저작권문제에서 이런 전철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외국에 대해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히 권리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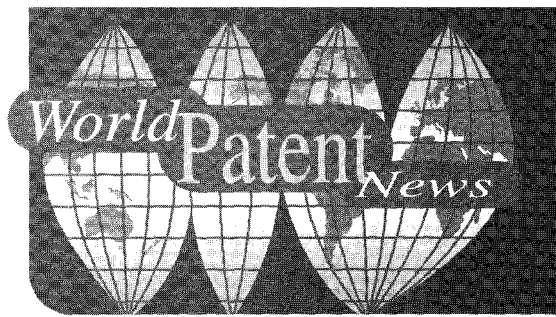
출처 동아일보

## WIPO, 인터넷 도메인 남용 방지 대책 마련

인터넷 도메인의 남용을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범이 내년 상반기안에 마련될 전망이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는 10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도메인의 무단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스 귀리 WIPO사무차장은 이날 기자회견



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내년 4월말까지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인터넷 도메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WIPO 회원국과 인터넷 관련 단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도메인 문제를 지적재산권 보호와 연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이런 방안은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EU), 프랑스,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WIPO 측은 설명했다.

WIPO의 이번 검토작업에는 ▲유명인사의 이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환자보호를 위한 공공재산으로 선정된 의약품명칭 ▲파리협약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의해 상표등록이 금지된 정부간 국제기구의 명칭 ▲지리적 표시, 용어, 또는 출처표시 ▲기업의 상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WIPO는 인터넷 도메인과 상표의 분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WIPO 산하 중재조정센터에 접수된 750건 가운데 345건이 해결됐다.

한편 WIPO의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된 인터넷 도메인 명칭은 전세계적으로 1천550만개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02년까지 온라인 접속인구는 2억5천만명을 초과하고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1-2002년 사이에 3천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 日, 계능 특허기준 G8 정상회담서 제기

일본 정부는 인간계능과 관련된 특허기준을 마

련하기 위해 오키나와 G8 정상회담에서 이를 정식 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계능정보를 특허로 인정하기가 애매한데도 일부 기업이나 조직이 독점하여 의료개발 등의 응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한편 G8 정상회담 참가국들도 해독이 끝난 인간계능 정보를 신속히 공표하고 특허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서두른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전자신문

## 日, 소프트웨어도 특허 대상에 포함

이르면 올해 말부터 소프트웨어도 일본에서 특허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일본 특허청은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인정하고 올해 중 법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특허청은 종전까지 '형태가 있는 사물'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경우 플로피디스크 CD롬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해 '장치'로 인정받아야 특허를 딸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CD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주고받게 되면서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 일본 특허법은 특허권을 침해한 소프트웨어를 기록매체에 저장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특허법 위반이 되지만 인터넷으로 송수신하면 처벌이 안된다. 유럽에서는 이미 2년전 관련법이 개정된 바 있다.

출처 매일경제

반독2000-08